공공청사서 폭염 탈출?…시민들 "여기도 덥네요"

찜통 더위에 관공서·무더위쉼터로
에너지 규정따라 26~28도 제한
"더위 해소 도움 안돼" 잇단 민원
"지하철역사도 덥고 습하다" 호소
통행제한한 충장로 차량 열기 짜증도

폭염이 계속된 24일 광주시 북구 문흥근린공원 정자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길 가다 너무 더워서 구청에 들어왔는데, 여기도 그렇게 시원하진 않네요"

광주 지역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돈 24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구청 민원실은 더위를 피해 들어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주민들은 더위가 가시질 않는지 민원실에 놓인 소파에 앉아서 하염없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으며, 청사 내 화장실은 세수를 하며 열을 식히려는 주민들이 줄을 이었다.

남구청사를 찾은 정종금(여·76)씨 역시 손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냈다. 정씨는 "바깥이 너무 더워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다"며 "날이 워낙에 더우니 웬만한 에어컨 바람으로는 소용없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시 서구에서도 청사 내부가 덥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광주시 서구는 최근 구청장 직통 민원 플랫폼 '바로 문자하랑께'를 통해 "서구청 내부가 습하고 덥다"는 민원 4건을 잇따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에 지난 20일부터 내려진 폭염특보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공공청사나 은행, 무더위 쉼터 등으로 피서를 떠나고 있으나, "더위 해소에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청사의 적정 온도가 행정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어 강한 냉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의 온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26~28도로 제한된다. 민원실, 콜센터, 철도·지하철 역사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조정할 수 있다.

주민들은 26도 안팎의 실내온도로는 최근처럼 기온과 습도 모두 높은 날씨를 이겨내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중교통시설인 지하철도 무더위를 피하진 못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를 찾은 어르신들은 "밖이나 안이나 덥고 습한건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았다.

남광주시장역 무더위쉼터에서 더위를 식히던 박선영(64)씨도 "이번 여름 중 오늘이 가장 더운 것 같다. 역사 안에서도 더위가 가시질 않는다"며 "집에서 얼음물까지 챙겨왔는데 소용이 없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힌다"고 손부채질을 했다.

금남로4가역을 찾은 김정자(여·82)씨는 "평소엔 지하철역이 시원하기 때문에 피서를 왔는데 오늘은 이곳도 덥다"면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게 나을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지난 6월부터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양동시장역과 화정역, 농성역 등 10개역에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다. 무더위쉼터에는 목재 평상과 대형선풍기가 설치됐고 당일 기온에 따라 냉방시스템도 가동한다.

그럼에도 최근 3개월간 광주교통공사에 접수된 온도 관련 민원은 5월 43건, 6월 69건, 7월 29건 등 총 141건에 달했다.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내부의 경우 사람이 몰리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 온도를 더 낮추고 있으며,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사 내 방풍문 설치도 완료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보행자들은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두 배의 더위를 느끼고 있다.

이날 광주시 동구 충장로 1~5가 구간을 걷던 시민들은 차량 통행 금지 구역임에도 아랑곳않고 통행하는 차량들에 연신 눈살을 찌푸렸다.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차량 열기와 경적 소리까지 들리니 피로감이 더하다는 것이다.

정민영(여·26)씨는 "그렇지 않아도 덥고 습해서 불쾌한데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온 차량의 열기 때문에 짜증까지 난다"며 "더위 때문에 성격까지 망칠 것 같다"고 말하곤 더위를 피해 인근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감사관 채용 외압 행사 혐의 광주교육청 간부 영장 기각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당시 교육감 동창의 점수를 부당하게 상향해 준 혐의를 받는 광주시 교육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광주시 교육청 인사 담당 팀장인 A씨가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죄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범죄혐의 내용·전과·심문 태도·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결과 감사관으로 임용된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됐다. A씨는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를 포함한 2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감사관으로 선정된 B씨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사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불법 전화방 혐의' 등 정준호 의원 불구속 기소

정 의원 "검찰, 정국돌파용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시 북구갑) 의원을 불법전화방 운영과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A씨와 SNS 간사직을 맡은 B씨 등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168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전화홍보 활동과 채용청탁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법원의 무죄판결로 당당히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지검의 기소는 최근 검찰 내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면서 "검찰이 그동안 무리했던 정치적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증거법 대원칙을 무시하고 정국돌파용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숙박업소 업주 살해 60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가 살해혐의를 인정했다.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A씨가 숙박업소 업주 B(64)씨를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숙박업소를 출입한 점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살해 동기와 B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인·허가 편의 대가 14억 챙긴 특수목적법인 전 대표 2심도 실형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광주 아파트 건설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나상아)은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추징금이 과하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에서 부과된 추징금 7억7000여만원을 4억40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재개발 사업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대행업자들에게 '지자체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직 단체장, 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재개발 인·허가 처리를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1심에서 모두 고려됐다"면서 "다만 1심에서 추징된 금액 전부를 A씨가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추징금 감액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빛고을 SPC 측은 A씨의 비위는 중앙공원 사업과는 무관하고, 법인과 상관없는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대표를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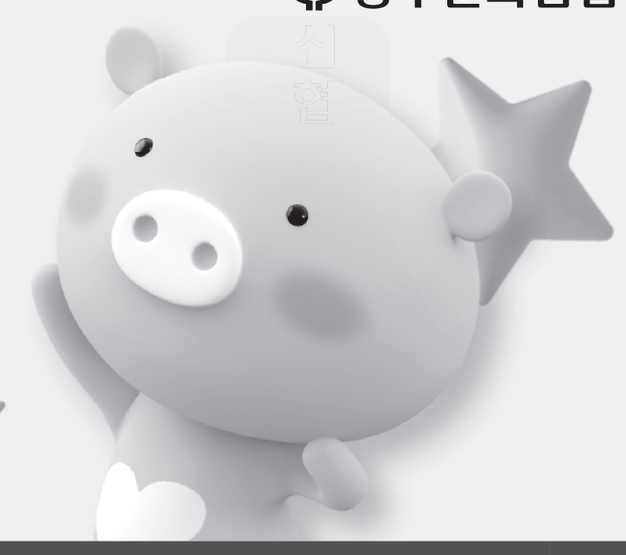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